

## 민족주의와 동북아 지역협력

최진우 (한양대학교 교수)

**전** 세계적인 신지역주의의 추세 속에서도 동북아에서는 제도화된 형태의 지역통합의 진전이 매우 더디며, 그 이유로 강력한 민족주의 정서가 꼽히고 있다. 근대적 국제관계의 틀에 머무르고 있는 동북아 국가들에게는 주권 수호가 가장 중요한 국가이익이며, 따라서 주권 침식의 가능성을 수반하는 지역통합의 추구는 정권의 정당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민족주의는 정당성의 기반이고, 지역주의와 민족주의는 모순관계에 있으므로 동아시아의 정치 지도자들은 지역주의에 적극적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족주의, 정당성, 지역주의 사이의 연결고리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이견이 있고, 더욱이 지역통합이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평화를 위한 처방이 될 수 있다면 꾸준히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담론을 확대재생산함으로써 '상상된 공동체'로서의 동아시아에 대한 지역 정체성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요청된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4.10.31.) 발표자료

## 목 차

1. 서론
2. 신지역주의 등장과 동북아
3. 동북아 지역협력의 제도적 저발전과 민족주의
4. 민족주의와 정치적 정당성
5. 결론

## 1. 서론

- 동아시아 또는 동북아 지역통합의 저발전은 이미 상당 기간 학문적 관심을 끌어난 주제
  - 다양한 요인이 거론되는 가운데, 관념적 요인의 하나로 민족주의 정서가 지목되고 있음(또 다른 관념적 요인으로는 문화적 이질성, 제도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이 거론됨)
- 민족주의는 문화적 요인이며 정체성의 문제임. 이것은 오랜 기간을 통해 누적적으로 형성돼 온 것이기 때문에 쉽게 바뀌기 어려움
  - 민족주의가 지역통합의 걸림돌이라면 동북아 지역통합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으며, 따라서 향후 전망 또한 비관적일 수밖에 없음
- 정말 민족주의가 문제인지, 만일 문제라면 왜 문제인지에 대한 대답을 구해보고, 과연 민족주의가 지역통합을 저해하는 결정적 요인인지, 혹은 민족주의에도 불구하고 지역통합이 진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를 탐색해 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임

## 2. 신지역주의의 등장과 동북아

- 19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지역주의 경향이 강화됨
  - 이는 1950년대 유럽을 필두로 전 세계에 확산됐으나 유럽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실패로 돌아갔던 1세대 지역통합과 구별해 2세대의 신지역주의(new regionalism)로 지칭됨
  - 1세대 지역통합은 냉전의 전개에 대한 대응
  - 1990년대의 신지역주의 또한 국제정세의 구조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Hettne and Söderbaum 2000, p.457)
    - 냉전 종식에 따른 양극 체제의 소멸
    - 미국 패권의 상대적 쇠퇴와 지역협력에 대한 미국의 수용적 태도(permissive attitude)
    - 국가중심적 베스트팔렌 체제의 이완과 상호의존성 및 세계화의 확산
    - 개도국과 탈공산화된 중·동유럽 국가들이 신자유주의적 사고에 기반을 둔 경제발전 모델과 정치 체제 전환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태도가 변화
- 지역통합은 전 세계적 현상으로 확산됐으나 동북아에서만만큼은 지역통

합이 상대적으로 지체 또는 저발전됐다는 평가

- 이러한 동북아의 상황은 이론적 도전이자 정책적 도전을 제기
  - 왜 동북아는 전 지구적 현상의 예외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
  - 동북아 지역통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강구가 필요
  
- 동북아 지역통합에 대한 두 가지 평가
  - 동북아 지역통합은 저발전: 예) “동북아는 공식적 제도의 결핍(organizational gap)이 지구상에서 가장 두드러진 지역”(Calder and Ye 2004, 191)
  - 동북아에서의 지역통합이 저발전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유럽과는 다른 형태의 지역통합이 진행 중(Katzenstein 1997, 3): 예) 동북아를 포함한 동아시아에서는 발전의 경로는 다르나 유럽과 마찬가지로 규제적 지역주의(regulatory regionalism)가 부상하고 있다는 주장(Hameiri 2013)
  
- 두 가지 견해가 공유하고 있는 인식: 동아시아에서는 제도화된 형태의 지역통합 부재(Katzenstein 1996; Archarya 2007)
  - 말하자면 동아시아에는 ‘지역화’(regionalization)는 진행되고 있지만 ‘지역주의’(regionalism)는 부재하다는 것
    - 지역화: 국가 간 협력의 공식적 제도화를 수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제적 및 사회적 상호의존의 심화
    - 지역주의: 국가 간의 공식적 합의를 통한 초국가적 기구의 설립과 일정 부분의 주권 이양을 수반하는 제도화된 형태의 역내 국가 간 협력
  - Hettne and Söderbaum의 “지역성”(regionness) 개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동아시아 지역통합은 유럽에 비해 제도화의 수준이 낮음
    - 지역성의 다섯 가지 수준(Hettne and Söderbaum 2000, pp.463-468)
      - ① 지역 공간(regional space): 산개된 소규모 공동체들이 물리적 거리의 근접성에 힘입어 상호 간의 접촉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상태
      - ② 지역복합체(regional complex): 서로 분리돼 존재하는 소규모 공동체들 간의 접촉, 교류, 거래가 증가하면서 하나의 사회체제(social system)가 형성되고 지역정체성의 맹아가 싹트는 단계. 지역 공간의 단계와는 달리 사실상 지역화(regionalization)가 시작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교류와 거래가 호혜성과 상호신뢰 등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시안적이고, 이기적 이익 추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불안정성이 내재된 상태임. 상호작용의 행위 단위는 국가
      - ③ 지역사회(regional society): 국가를 비롯한 다양한 행위자들 간에 다양한 수준에서 복합적으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 국경의 의미가

**지역통합은  
전 세계적 현상으로  
확산됐으나  
동북아에서만큼은  
지역통합이  
상대적으로 지체 또는  
저발전됐다는 평가**

다섯 단계 가운데  
EU는 5단계에  
진입했으며,  
동아시아는  
2단계에서 3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수준인 것으로 판단

희석되고 행위자들 간의 관계가 규칙에 기반해 형성됨. 이 단계는 지역성의 심화가 제도화된 협력관계를 통해 진행될 수도 있고 행위자들의 자발적 의지에 따라 진행될 수도 있음. 영국학파의 ‘국제사회’ 개념이 지역 수준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④ 지역공동체(regional community): 지역이 독자적인 정체성을 구축하게 되고 행위자로서의 능력을 갖추게 되며 정통성을 인정받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게 되는 단계. ‘안보공동체’가 여기에 해당되며 경제적으로는 시장의 통합을 넘어 행위자들 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재분배의 메커니즘까지 갖추므로써 국가가 수행하는 기능의 일부를 맡게 되는 단계임
  - ⑤ 지역 국가(regional state):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의 EU가 여기에 해당됨. 기존의 정치 단위들의 자발적인 주권 통합에 따라 형성된 분권적이고 다층적인 거버넌스를 특징으로 하는 지역 기구가 시장통합, 대외 안보, 대내 치안, 사회 정책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단계
- 다섯 단계 가운데 EU는 5단계에 진입했으며, 동아시아는 2단계에서 3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 3. 동북아 지역협력의 제도적 저발전과 민족주의

- 제도적 저발전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음
  - 국제 체제적 요인(현실주의) - 힘의 분포 및 힘의 분포상의 변화에 초점 - 미국 중심의 양자적 관계가 지배적임. 미국이 동북아 지역주의를 억제. 또는 유럽과 달리 미국이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양자관계 중심으로 편성, 다자주의적 협력의 기반이 부재한 관계로 다자주의적 지역주의가 발전을 못함(Katzenstein 1996). 아울러 무역의 안보 외부효과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와는 경제적 차원에서 지역통합에 대해서도 주저할 수 있으며 따라서 경제적 지역통합은 우호적 관계에 있는 국가들끼리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지역통합에 대한 무역의 안보 외부효과의 영향에 대한 논의는 Mansfield and Solingen 2010, p.151에서 소개되고 있음). 이는 전형적인 상대적 이득의 문제이기도 함
  - 국내정치적 요인 - 지역주의에 친화적인 제도적 전통이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는 부재(Katzenstein 1996) (역사적 제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의 시각)
  - 결정적 계기(critical juncture) 가설 - 동북아에는 한국전쟁이라는 결정적 계기를 통해 구축된 질서가 온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근본적으

로 재편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새로운 결정적 계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 제도화된 다자주의 협력구도가 부재한 현상 유지의 상태로 지속되고 있는 것(Calden and Ye)

- 동아시아에서의 제도화된 지역통합의 부재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민족주의
  - 민족주의를 지역통합의 최대 장애 요인으로 지목하는 견해: Rozman 2000; Quinones 2013; He 2004; 김미경 2010
  - 민족주의를 지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의 특수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견해(각 지역에서의 지역통합의 수준, 양상, 속도 등을 비교함에 있어 동아시아 이외의 지역에서는 민족주의가 지역통합의 저발전, 지체 등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경우는 별로 없음. 만일 동아시아에서만 민족주의가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동북아 민족주의의 특수성에 대한 연구 필요)
  
- 민족주의가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걸림돌이 되는 이유
  - He에 의하면 아시아 지역주의는 이러한 민족주의적, 국가중심적인 규범의 기반 위에 구축되어 있다고 함. 동아시아 국가들이 제안하는 지역통합의 청사진은 모두 자신들의 민족주의적 프로젝트의 표현일 따름. 따라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쏟아내고 있는 다양하기 그지없는 지역주의에 대한 아이디어들은 근본적으로 서로 양립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He 2010, 107)
  - He는 민족주의를 주권 수호의 의지, 또는 국익 증대의 의지 등으로 간주(He 2010, 119-120)
  
- 동아시아 국가들은 주권의 침해, 자율성의 제약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지역주의의 심화에 대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음
  - 지역적 수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수준의 역량과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 수준의 협력이 필요한데 이때 주권에 제약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
  - 지역주의를 인접 지역의 국가들 간에 제한된 범위에서 행해지는 정부 간 협력 정도로 인식하는 한편 그러한 협력의 목표는 국가이익의 추구에 두어짐
  
- 나아가 동아시아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은 주권의 신장, 자율성의 확대를 추구하는 모습을 국내 유권자들에게 보임으로써 정치적 지지 기반을 구축하려 함
  - 지금까지 동아시아 정치 지도자들이 제안한 다양한 지역주의 모델 또

**동아시아 국가들이 제안하는 지역통합의 청사진은 모두 자신들의 민족주의적 프로젝트의 표현일 따름. 동아시아 국가들은 주권의 침해, 자율성의 제약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지역주의의 심화에 대해 소극적...**

**동아시아 지역주의  
비전을 크게 나누자면  
아시아주의와  
태평양주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각각 중국과  
일본이 그 주축이  
되고 있으며, 이 둘  
사이에는 매우기 힘든  
간극이 존재**

한 대외적 자율성과 국제정치적 위상을 제고함으로써 국내적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하나의 방편이었음. 이른바 ‘지역주의의 과잉공급’(oversupply of regionalism: 각기 다른 내용을 가진 지역주의 구상이 넘쳐난다는 점을 꼬집은 표현임)은 바로 이러한 과정의 결과임. 문제는 이러한 제안들이 국내정치적인 정통성 확보 게임에서 비롯된 관계로 이웃 국가들의 동의를 받기 힘들다는 점. 따라서 제안만 무성하고 지역통합의 제도화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필연적 결과(Cho and Park 2014)

-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의 지역주의에 대한 논의는 대내적으로는 주권과 자율성의 보존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켜야 할 필요성,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범세계적인 추세인 지역주의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제사회의 규범을 적극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줄 필요성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한 ‘조직된 위선’(김미경 2010)이라는 것
- 궁극적으로 이 논의에 따르면 동아시아 국가들에는 강력한 민족주의 정서가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정서에 비추어볼 때 주권의 제약과 자율성의 감소를 의미하는 지역협력의 제도화(지역주의)를 정치 지도자들이 추진했을 때 이에 대한 역풍이 있을 것이며, 나아가 지역주의 담론을 정치 지도자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역주의의 진전에 대한 진정성이 결여돼 있고, 각 국가가 제시하는 지역주의 플랜은 자국의 이익 및 자국의 국내정치적 게임의 동학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수용하기 힘들다는 것. 예컨대 동아시아 지역주의 비전을 크게 나누자면 아시아주의(Asianism)와 태평양주의(Pacifism 또는 Asia-Pacificism)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각각 중국과 일본이 그 주축이 되고 있으며, 이 둘 사이에는 매우기 힘든 간극이 존재
- 민족주의는 정치 지도자들의 행동반경을 결정
  - 정통성 확보의 게임의 동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정치 지도자들은 지역주의 담론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민족주의 어젠다를 기각할 수 없기 때문에 동아시아 국가들의 지역주의 비전들은 서로 양립이 어렵고 그 결과 역내 국가들 간의 합의하에 추진될 수 있는 지역주의 플랜의 수립이 어렵다는 것

## 4. 민족주의와 정치적 정당성

- 민족주의는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
  - 민족주의 정서에 호소해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동기는 특히 리더십이 불안정한 경우 더 빈번하게 나타나며, 민족과 국가의 일치성에 도전이 제기될 때 더 강해짐
- 정당성에는 세 가지 수준이 있음(Connor 2002, 27 참조)
  - 정권의 정당성(regime legitimacy) - 정치 지도자, 정당, 정파. 예)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등 (정당성 거부의 방식 - 정권 교체)
  - 정부의 정당성(government legitimacy) - 정치 체제의 형태. 예) 사민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등 (정당성 거부의 방식 - 혁명)
  - 국가의 정당성(state legitimacy) - 국가의 존재 방식에 대한 판단. 예) 다민족국가, 분단국가 등 (정당성 거부의 방식 - 분리주의, irredentism 등)
- 민족주의를 정당성 획득의 도구로 이용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의 동기가 작용(Downs and Saunders 1998-1999, 114-115)
  -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가의 무능력을 감추기 위한 방편으로 민족주의 구호를 주창
  - 팽창주의적 성향을 지닌 정부 내 인사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민족주의 구호를 주창
  - 국내정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정치 엘리트들이 민족주의 정서에 부채질
- 민족주의는 입지가 약한 엘리트들이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아니면 잠재적 도전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
  - 지역통합의 맥락에서는 지지 기반에 위협을 받는 정치 지도자들이 지역통합에 의한 주권의 제약을 부각시키며 민족주의 가치의 수호자로 자처함으로써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받고자 시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정당성 확보를 위한 민족주의 담론이 우려스러운 것은 민족주의 담론에 불이 붙었을 때 이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과도한 열기를 떨 수 있다는 것
  - 중국의 국가 민족주의(state nationalism)와 대중 민족주의(popular nationalism)의 괴리가 그 예. 민족주의의 강화 추세가 통제를 벗어나면 오히려 통치의 정당성에 도전하게 되기도 함. 주권과 국가의 위상이 위협을 받

**민족주의는 입지가 약한 엘리트들이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아니면 잠재적 도전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

**민족주의가 부활되면****국가 간 또는 집단 간의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보는 관점에서도****민족주의는 우려스런****현상이지만,****민족주의의 부활이****갈등적 상황에서****파생되는 것이라고 보는****관점에서도 민족주의의****용기는 곧 갈등적 상황이****심화되고 있는 것을****의미하기 때문에****우려스러운 현상인****것은 마찬가지**

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경우가 바로 그것. 따라서 민족주의는 양날의 칼. 때로는 통치의 정당성의 기반이 되지만 통치의 정당성에 대한 도전의 원천이 되기도 함

- 나아가 민족주의는 국가 간 갈등(국가 내부적으로는 민족 집단 간의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서 국가 간 협력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민족주의와 폭력성은 강력한 ‘선택적 친화성’(selective affinity)을 갖고 있다는 견해도 있음.<sup>1)</sup> 아울러 민족주의와 폭력성 사이의 인과관계를 역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음. 즉 민족주의가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적 대결의 경험이 민족주의 이념을 호출한다는 것. 따라서 민족주의가 부활되면 국가 간 또는 집단 간의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는 관점에서 민족주의는 우려스런 현상이지만, 민족주의의 부활이 갈등적 상황에서 파생되는 것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민족주의의 용기는 곧 갈등적 상황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현상인 것은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민족주의의 활성화는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음
- 민족주의에 대한 이런 우려는 과장됐을 가능성이 높음
  - 민족주의가 실제로 레토릭의 수준을 넘어 국가 간 물리적 충돌로 진화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며, 이념적 요인만의 작용으로는 어려운 일
  - 많은 경우 레토릭의 수준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음
- 민족주의가 폭력성을 수반하는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는 과장된 것일 수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가 협력의 진전을 저해하는 것은 가능한 일. 지역통합이 주권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된다면 민족주의 정서는 지역통합에 부정적인 에너지로 작용할 것
- 민족주의는 정당성의 기반으로서의 작용을 별로 하지 못한다고 하는 연구도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음. Gilley에 의하면 가장 강력한 정당화의 효과가 있는 요인들은 굶겨버넌스, 민주적 권리, 복지 혜택 등이며, 일반적으로 정당성의 원천으로 생각되고 있는 것들 중 사실과 다른 것으로는 혈연적 동질성과 민족주의를 꼽고 있음. 다만 Gilley는 계량적 연구를 통해 정당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여러 요인들의 실제 효과를 계량적 연구를 통해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왜 민족주의가 정당성의 기제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음(Gilley 2006, 48)

**5. 결론**

- 동북아에서 민족주의가 지역주의의 걸림돌이 되는 이유는 결국 정치적 정당성의 문제
  - 민족주의는 정치적 정당성의 중요한 근거
  - 지역주의는 민족주의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
  - 지역주의는 정치적 정당성의 보호를 위해 거부되거나, 아니면 립서비스의 대상에 머무르게 됨
  
- 적어도 세 가지 질문이 가능
  - 과연 민족주의가 정치적 정당성의 근거인가
  - 민족주의는 지역주의와 대립관계인가
  - 지역주의의 추구가 정치 지도자들의 정치적 정당성을 높이는 경우는 없는가?
  
- 민족주의와 정치적 정당성
  - 민족주의가 정치적 정당성의 중요한 근거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지 않음
  - Connor 2002; Downs and Saunders; Darr 2011 등이 그 예
  - 전술한대로 민족주의와 정치적 정당성 간에는 별반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도 있음(Gilley 2006)
  
- 민족주의와 지역주의
  - 민족주의는 최상위의 정체성이며, 지역주의 등의 다른 정체성과는 양립 불가능한가?
  - 최근의 스코틀랜드의 분리독립에 대한 주민투표의 과정은 강한 민족적 정체성과 유럽적 정체성이 서로 배타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스코틀랜드 민족주의에 입각해 분리독립을 지지한 사람들이 동시에 유럽연합에의 가입을 원하는 경향을 보임
  - 사실 유럽의 경우, 유럽적 정체성과 국가정체성이 반드시 서로 제로섬관계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연구가 적지 않음(Medrano and Gutiérrez 2001). 물론 서로 제로섬관계에 있다는 연구도 있음(Carey 2002)
  - 적어도 지역정체성과 국가정체성 간의 관계는 완전히 입증된 것은 아니며 아직도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 국가들의 민족정체성이 지역정체성의 형성에 결정적 장애 요인이 된다고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임
  
- 지역주의와 정치적 정당성
  - 지역주의의 추구가 정치적 정당성을 가져다주는 경우는 없는가?

**지역정체성과 국가정체성 간의 관계는 완전히 입증된 것은 아니며 아직도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 국가들의 민족정체성이 지역정체성의 형성에 결정적 장애 요인이 된다고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

**동북아 통합 담론을  
추상적 수준과 구체적  
수준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확대재생산함으로써  
동북아 지역통합의  
노력과 함께 정체성의  
형성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 중국의 경우 민족적 정체성의 유지 발전도 정당성의 중요한 원천이지만, 경제 발전을 통한 생활 수준의 개선 또한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함. 따라서 만일 지역주의가 중국의 경제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면 지역주의가 정치적 정당성의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
- 다만 지역주의와 정당성의 관계는 경제 발전과 생활 수준 향상이라는 중간 단계를 거쳐야 하는 간접적 관계이고, 그 효과가 나타나기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정치적 동원 효과는 제한적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 민족주의와 지역주의의 이러한 비대칭성으로 인해 민족주의의 효과가 지역주의의 효과를 압도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만일 민족주의가 어떤 이유에서건 동북아 지역주의의 걸림돌이라면, 그러나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지역주의가 추구되어야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일단 동북아 통합 담론을 추상적 수준과 구체적 수준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확대재생산함으로써 동북아 지역통합의 노력과 함께 정체성의 형성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지역통합은 기본적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의 정체성 형성이 수반될 때 가능성이 높아짐. 처음부터 먼저 정체성을 형성해 놓고 통합을 진행해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나, 통합의 과정에서 정체성의 형성이 수반되지 않으면 결속력 있는 공동체의 구축이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따라서 동북아 지역통합의 과정에는 동북아 정체성의 형성 노력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
- 물론 동북아 3국 국민들 간에 공통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그러나 그것이 공동체 수립 노력을 포기하는 원인이 되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공동체 수립의 노력을 지속시켜야 함
- 정체성은 상징과 담론을 통해 생성됨
  - 이익의 공유에 초점을 맞춘 설득력 있는 논리와 정서적 유대감을 강조하는 감성적 호소가 결합된 비전과 당위성이 제시되고 이에 대한 공감대가 만들어질 때 정체성이 형성
- 앤더슨(Benedict Anderson)이 지적했듯 ‘민족’은 ‘상상된 공동체’(imagined community)임(Anderson 1991)
  - 민족은 민족에 대한 담론의 산물.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다면 민족은

존재하지 않음. 민족주의 없는 민족은 성립 불가능

- 이러한 논리는 지역 차원에도 적용될 수 있음. 지역 또한 상상을 통해 공동체로 구성(construct)될 수 있음
  - ‘지역’이라는 개념이 더 이상 지리적 근접성이나 문화적 유사성, 정치 경제적 연결성만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외부 행위자들이 인정하는 집합적 정체성을 근거로 한다는 것이 최근 지역주의 연구에서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음
  - ‘지역성’(regionness)이란 지역주의를 주창하는 상상과 담론에 의해 형성되며(Bettne and Soderbaum 2000, p.469) 지역의 실존성은 ‘현실’ 뿐만 아니라 담론 속에서 어떻게 표상(representation)되는가에 의해 규정되는 바가 크다는 것(Acharya 2007, p.634)
- 동북아 공동체는 공동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 따라서 동북아 공동체의 구축을 위해서는 동북아 담론, 즉 동북아 공동체에 대한 상상이 지속되어야 함
  - 주변국들에 비해 왜소한 물리적 능력을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동북아 담론의 확대재생산을 통해 동북아에 지역통합이라는 공공재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동북아 공동체는  
공동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 따라서  
 동북아 공동체의  
 구축을 위해서는  
 동북아 담론, 즉  
 동북아 공동체에 대한  
 상상이 지속돼야...**

주석

- 1) 민족주의와 폭력성 간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견해에 대한 소개와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연구로는 Siniša Malešević, “Nationalism Intrinsically Violent?” *Nationalism and Ethnic Politics*, 19:1, 2013, pp.12-37 참조.

참고문헌

김동노. 2012. “민족주의의 다원화와 이념 갈등.” 『동방학지』 159, pp.369-420.

김미경. 2010. “조직된 위선과 동아시아 지역통합: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제도적 저 발전에 대한 이론적 소고.” 『아세아연구』 53:4, pp.187-220.

Acharya, Amitiv. 2007. “The Emerging Regional Architecture of World Politics.” *World Politics*, 59:4, pp.629-52.

Anderson, Benedict. 1991.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New York: Verso.

Breslin, Shaun. “Comparative Theory, China, and the Future of East Asian

- Regionalism(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36:3, pp.709-729.
- Calder, Kent and Min Ye. 2004. “Regionalism and Critical Junctures: Explaining the ‘Organization Gap’ in Northeast Asia.”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4, pp.191-226.
- Carey, Sean. 2002. “Is National Identity an Obstacle to European Integration?” *European Union Politics*, 3:4, 387-413.
- Cho, Il Hyun and Seo-Hyun Park. 2014. “Domestic Legitimacy Politics and Varieties of Regionalism in East Asia.”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40:3, pp.583-606.
- Connor, Walker. 2002. “Nationalism and Political Illegitimacy.” Daniele Conversi, ed. *Ethnonationalism in the Contemporary World: Walker Connor and the Study of Nationalism*. Routledge.
- Downs, Erica Strecker and Phillip C. Saunders. 1998-1999. “Legitimacy and the Limits of Nationalism: China and the Diaoyu Islands.” *International Security*, 23:3, pp.114-146.
- Gilley, Bruce. 2006. “The Determinants of State Legitimacy: Results for 72 Countries.”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7:1, pp.47-71.
- Hameiri, Shahar. 2013. Theorising Regions through Changes in Statehood: Rethinking the Theory and Method of Comparative Regionalism.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39:2, pp.313-335.
- He, Baogang. 2010. “East Asian Ideas of Regionalism: A Normative Critique.”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58:1, pp.105-125.
- He, Baogang. 2012. “A Concert of Powers and Hybrid Regionalism in Asia.” *Austral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7:4, pp.677-690.
- Hettne, Björn. 2005. “Beyond the ‘New’ Regionalism.” *New Political Economy*, 10:4, pp.543-571.
- Hettne, Björn and Fredrik Söderbaum. 2000. “Theorising the Rise of Regionness.” *New Political Economy*, 5:3, pp.457-473.
- Katzenstein, Peter J. 1996. “Regionalism in Comparative Perspective.” *Cooperation and Conflicts*, 31:2, pp.123-59.
- Katzenstein, Peter J. 1997. “Introduction: Asian Regionalism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 Peter J. Katzenstein and Takashi Shiraiishi, eds. *Network Power: Japan and Asi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Malešević, Siniša. 2013. “Is Nationalism Intrinsicly Violent?” *Nationalism and Ethnic Politics*, 19:1, pp.12-37.
- Mansfield, Edward D. and Etel Solingen. 2010. “Regionalism.”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3:1, pp.145-163.
- Medrano, Juan Diez and Paula Gutiérrez. 2001. “Nested Identities: National and European Identity in Spain.” *Ethnic and Racial Studies*, 24:5 pp.753-778.
- Quinones, C. Kenneth. 2013. “Regionalism versus Nationalism in Northeast Asia.” *Journal of Political Criticism*, 13, pp.1-22.

- Rozman, Gilbert. 2000. "Restarting Regionalism in Northeast Asia." *North Pacific Policy Papers*, No. 1, pp.1-25.
- Rozman, Gilbert. 2004. *Northeast Asia's Stunted Regionalism: Bilateral Distrust in the Shadow of Global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olingen, Etel. 2008. "The Genesis, Design and Effects of Regional Institutions: Lessons from East Asia and the Middle East."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52, pp.261-294.
- Warleigh-Lack, Alex and Ben Rosamond. 2010. "Across the EU Studies-New Regionalism Frontier: Invitation to a Dialogue."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48:4, pp.993-1013.

❖ 저자 약력

■ 최진우

現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정치학 박사(1995). 유럽통합이 주된 학문적 관심사이며 EU의 사회정책, 지역정책, 통화통합, 공동농업 정책, 공동외교안보정책, 양성평등정책, 문화정책 등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 바 있고, 최근 문화와 정치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기획 및 감수: 도종윤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고정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강윤미 (제주평화연구원 연구보조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97-858)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8-6522

E-mail: [policyforum@jpi.or.kr](mailto: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